

붓물 터진 해외여행... 지역 여행업계도 '활짝'

지난달 국제선 2만7000편 운항
코로나이전 60% 수준까지 회복
광주 여권 발급 전년비 3.5배 ↑
지역업계 "수요 급증에 기대감"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출국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시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침체됐던 여행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달 국제선 운항이 3만여편에 달하며 코로나19 이전의 60%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광주지역 여권 발급 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던 국제선 여객 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웃음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선 운항편수는 2만7000여편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1월) 대비 약 60%까지 회복했다. 국제선 전체 여객 수는 약 58%, 특히 인천공항 여객 수는 약 62% 회복됐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국제 여객 수는 이미 2019년 같은 달 대비 각각 35%, 53%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 달 설 연휴기간에는 해외 여행객이 더욱 증가하며 58%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역 규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여행객 수만 133만명을 기록, 지난해 8월(16만명) 대비 무려 8.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도 10.8% 웃도는 수치다.

또 지난해부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아시아 노선 여객 수는 전제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띠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폐지하며 항공운항 회복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달 여객 수(10만명) 회복률은 8%에 그쳤다.

이와 같은 국제선 운항편수와 여객 수 증가율을 반증하듯 광주지역 여권 발급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여권 발급 건수는 1만4384건으로 지난해 12월(3741건) 발급 건수의 3.5배에 달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겨울방학까지 맞물려 여권 발급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소 4일가량 걸리던 여권 발급 기간이 지난달부터 신청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열흘정도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소요기간이 길어지

면서 일회용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의 발급 건수도 하루 평균 20~30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진땀을 빼고 있는 여권 발급처와는 반대로 지역 여행업계는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모처럼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제주항공이 오는 4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라오스의 비엔티안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고 밝히는 등 각 항공사들의 정기노선 운항이 속속 재개되며 지역 여행업계의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광주 동구블로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에는 상담 예약을 미리 잡지 않고 그냥 방문하는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여행 문의가 많다"며 "개인은 물론 단체나 신혼여행 등 문의도 많고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됐으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여행업계가 전처럼 다시 활기를 띠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은행, 비대면 'KJB모바일 아파트대출' 출시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촉구

최고 연 2.7%p 우대금리 제공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APP)과 모바일웹뱅킹으로 신청하는 비대면 'KJB모바일 아파트대출'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KJB모바일 아파트대출'은 기존에 영업점 방문이나 필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전세금 반환자금, 타은행 대출 상환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광주·전남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점차 전국 범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대화형 입력 프로세스를 도입한 챗봇을 통해 직원과 직접 대화하듯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이를 반영한 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광주은행과 협약한 법무사와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 제출 항목은 최소화함에 따라 고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KJB모바일 아파트대출' 신청 대상은 본인 명의(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해 서류 제출이 가능한 개인 고객으로, 미성년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보험 가입 제한 고객을 신청이 불가하다.

대출 금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 이내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DSR), 자금용도, 세대 주택보유수, 담보물 소재지 및 연소득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에 통상 30년 이었던 대출 만기 기간을 최장 50년(만 50세 초과자인 경우 최장 40년)까지 늘려 고금리 시대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췄다.

대출 상환 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0년/15년/30년/40년/50년(거치 1년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다. 단, 50년 만기의 경우 만 5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거래실적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취급 후 최초 2개월까지는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0.7%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 우대금리를 재산정한다.

"손해배상제 제도화 시급"

전국의 건설인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 화성시 푸르마리 호텔 대회의장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회원사들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레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공사물량 할당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개입하는 등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더 이상 국민을 불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조 불법

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에 최대한 협조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 △건설현장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서를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권범 기자

노동 칼럼

휴직기간 중 사업장 폐업

육아휴직 중인 A씨는 오랜만에 연락한 동료에게 지난달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됐다.

육아휴직 중 폐업,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당연히 종료된다. 안타깝지만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만약 폐업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

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급받았던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폐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후지급금 제도에 따라 이 중 25%는 복직을 하고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하지만 A씨와 같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외에 노동자의 귀책 사유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임금체불 등)로 복직 후 6개월 전 퇴사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A씨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A씨는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해야 하며 노동청 조사 이후 체불금포함인사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



이연주
공인노무사

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진정 접수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퇴직일은 사업장의 폐업일자가 되기 때문에 폐업소식을 들은 날과 실제 폐업일에 차이가 있다면 더욱 서둘러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다. 실업급여 최소 수급일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8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전액을 수급받을 수 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에 따라 최대 7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육아 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 차근차근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휴직 기간 중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업으로 궁박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